때이른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속'…무더위 주의보

광주서 80대 '열사병'으로 쓰러져…당시 체온 40도 육박
전월 20일부터 광주·전남 7명…광주시, 폭염 전담반 가동

광주·전남지역 한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때이른 폭염에 온열 환자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폭염 전담반을 가동하고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전국에서 총 9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0명)과 비교하면 12명 늘어난 수치로, 때이른 더위에 평년보다 이르게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온열 질환자가 총 7명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7일 각각 1명씩, 전남에서는 이달 9일 1명, 11일 1명, 15일 2명, 16일 1명 등 5명으로 집계됐다.

질환별로는 열탈진(41.3%), 열사병(26.1%), 열경련(15.2%), 열실신(13.0%), 기타 순이었고 발생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가 30.4%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이어 오후 2-4시, 정오-오후 2시, 오후 4-6시가 뒤이었다.

광주·전남의 지난 15-17일 낮 최고기온은 15일 26.0-29.7도, 16일 26.8-32.8도로 급격히 올라 17일에는 26.7-33.0도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이 중 15일 오후 2시께 광주 남구 방림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폐지를 줍던 80대 노인 A씨가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조대가 출동했다.

이날 광주의 체감온도는 31도에 육박했고, 당시 A씨의 체온은 40도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조대는 현장에 출동해 열사병 증상을 호소하는 A씨에게 냉찜질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주말 사이 A씨 외에도 지역에서 2명의 온열 질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처럼 이른 온열 질환자 속출에 광주시는 폭염 전담반을 가동하고 비상상황 즉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오는 9월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광주시-자치구-기상청 등 각 분야 담당자들로 구성된 폭염 전담반을 유지하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재산 피해에 즉각 대처할 방침이다.

폭염주의보 발효 시 비상상황 관리 체제 가동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며, 폭염경보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건강, 시설, 상황관리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늘막 521곳, 무더위쉼터 2천176곳 등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더위쉼터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심인섭 자연재난과장은 "더위가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오면서 온열 질환 발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시간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방치하면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다"며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고 야외 작업장에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고 쉴 수 있는 그늘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복기자

5·18 공법 3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추징 3법' 입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고 있다. 〈5·18 부상자회 제공〉

"전두환 재산 환수 위한 추징 3법 통과돼야"

5·18공법 3단체·기념재단 '한목소리'…헌법전문수록 필요성 강조

오월 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이 고(故) 전두환 재산 환수를 위한 추징 3법 통과와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했다.

18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에 따르면 공로자·유족회, 5·18기념재단과 함께 전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 학살의 주범인 전씨는 대법원에서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 판결받았지만 922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했다"며 "이를 환수하기 위한 추징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징 3법'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됐으며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해도 상속 재산에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단체들은 "최근 손자(전우원)의 폭로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지만 법안은 아직 계류된 상태"라며 전두환 일가의 은닉 재산 추징을 위한 추징 3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것은 오월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특전사동지회 소속 회원들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안재영기자

광주지검, 5·18관련자 147명 재심 직권 신청 '144명 무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유죄 판결 받은 후 비상구제절차를 밟지 못한 시민 147명에 대한 재심을 광주지방검찰청이 청구해 최근까지 14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A(66)씨와 B(6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980년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정부 비방 인쇄물을 제작·배포하고, 집회에서 구호를 선창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B씨도 1980년 5월 대학생 시절 전두환 화형식을 하고, 집회에서 구호를 선창한 혐의 등으로 1982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당시 혐의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벌받고도 절차 등을 알지 못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 대해 2018년부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광주지검은 현재까지 127건 147명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147명 중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는 현재까지 144명이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복기자

법원 판결 3題

'여성 행세 남성 유인' 강도행각 10대들 징역형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유인,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공동 감금·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17)군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임모(17)군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군 등은 2023년 광주 북구에서 모바일 메신저 공개 채팅방을 개설해 여성인 척하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남성을 유인해 폭행·감금·협박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복기자

'아동학대' 법적다툼, 학부모-교사 손배 맞소송 '기각'

아동학대 혐의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B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맞서 B 교사가 제기한 손배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B 교사가 담임교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A씨 측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B 교사의 반소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 측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했다. /오복기자

LH, 건설사에 상수도 부담금 전가 행정소송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 원인부담금을 건설사에 전가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주택 건설 분양사 A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부담금 부과가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LH는 목포시 용해지구 택지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택지 일부에 연립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A사에 급수(상수도) 공사 비용으로 부담금 1천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오복기자